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The Effect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amily Policies, and Gender Equality on Fertility Rate :
Focused on OECD Countrie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출산율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 변수	V. 결론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가족정책, 양성평등가치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amily policies, and gender equality are related to fertility rate across countries. Multiple measures has been collected from various data sources(such as OECD, UNDP, and WVS) and the panel data set which includes (mostly) OECD countries range from 1990 to 2019 a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OECD countries sample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ertility rate, which implies that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does not

lead to a reduction in fertility rate. Second, the length of paternity leav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rtility rate whereas the direction is the opposit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maternity leave and fertility rate. This is attributed to the possibility that a longer period of maternity leave incurs the a higher opportunity cost of earning income, which leads to a reduced fertility rate. Third, countries with higher gender inequality index tend to have a higher fertility rate. Similarly, countries with higher gender equality value have a lower fertility rate. When the gender equality value is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education, politics, and employment, the gender equality value in education is the only sub-category which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fertility rate.

This study confirms that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may not be a contributing factor in the lowering of fertility rate but instead can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ertility rate. Also, the results show that family policies or gender equality values can be significantly affect fertility rate.

Key Wor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rate, family policy, gender equality value

I. 서론

출산에 대한 Becker(1993)의 자녀수요이론이나 Easterlin(1973)의 상대소득가설은 출산의 결정요인으로 가구소득, 자녀의 출산 및 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다. Becker(1993)에 의하면 부모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통해 효용을 얻으며, 따라서 자녀의 수(quantity)와 함께 자녀의 질(quality), 즉 자녀양육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부모가 출산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련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면, 자녀에 대한 수요는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얻는 효용과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잠재비용의 증가는 자녀 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Becker & Lewis, 1973).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신윤정·김지연, 2010; 송유미·이제상, 201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소영 외, 2018)에 의하면 향후 자녀계획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출산 중단 이유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16.8%, 자녀양육비 부담은 14.2%이며, 소득 및 고용 불안정(7.9%) 일·가정양립 곤란(6.9%)을 포함할 경우 약 45.8%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출산하지 않았다. 이는 자녀출산에 따른 비용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유지가 출산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출산을 위해서는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소득활동 기회가 상실되고, 자녀양육에는 직접적 비용 뿐 아니라 부모의 시간이나 정신적, 육체적 노동 등의 간접적 비용 부담이 크며, 이 또한 출산율을 감소시킨다(Roussel(1994), 민연경·이명석, 2013 '재인용').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으로 취업을 중단하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며,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동일 수준의 직업을 갖기 어렵다. 이는 미래소득의 감소와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거시적 관점의 국가 간 실증자료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직접적, 간접적 비용으로 인해 출산율을 감소된다는 경제학 이론이 유효하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신장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노동력 참가와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음에서 양으로 역전된 것이다. Kögel(2004)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이후부터 양의 관련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 OECD국가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분석한 Ahn & Mira(2002)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높아진 실업률과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의 붕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오히려 출산율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출산 결정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출산율은 하나의 인구학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결혼행태, 가치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수준, 돌봄의 사회화 방식, 삶의 만족도, 부부관계 등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요소들이 종합된 산물이기 때문이다(McDonald, 2006; Balbo et al., 2013).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규범과 가치의 변화, 성 역할 고정 관념의 변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노동 환경 또한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과 관련된 McDonald의 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은 유럽 선진국에서 양성평등이 출산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 많은 연구(McDonald, 2000; Torr & Short, 2004; 민연경·이명석, 2013; 이제상·송유미, 2016)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Chesnais(1998)는 유럽 국가에서 성평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제상과 송유미(2016) 또한 성격차지수가 선진국 그룹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눈에 띄게 신장되면서 저출산이 심화되었으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Castles(2003)는 21개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의 일과 가정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시행한 결과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음에서 양의 관계로 역전된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나 일반적 인식에서 경제적 원인이 가장 폭 넓게 거론되는 현실로부터 여성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에는 음의 내생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37조60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최근 발표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조선일보, 2021)에 이른 상황을 볼 때 가족정책의 효과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서 기혼여성의 출산의사 또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미혼여성의 결혼의사가 미혼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이소영 외, 2018) 성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나 문화권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어느 정도 고착되어 있으며, 그 근간을 이루는 성평등인식의 차이가 출산율에 작용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출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정책과 양성평등문화가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면 정부가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역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가족, 기업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사회적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시장노동과 출산 및 양육이라는 비시장노동에 대한 시간배분과 자녀양육비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이 시간 제약과 가계 제약 하에서 출산과 양육, 시장노동에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투입하고 조절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출산율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 변수

1. 경제학적 접근

개인의 출산행위를 설명한 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녀수요이론(Becker, 1993)은 가계가 두 가지 제약 하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녀 수요를 설명한다. 예산 제약 하에서 자녀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총소득과 자녀 가격, 즉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녀 가격과 다른 가정생산물의 가격이 일정하고 자녀를 정상재로 가정할 때, 가계의 총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가계총소득이 일정할 때 자녀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되면 자녀 수요는 감소 또는 증가된다. 또 가계는 시간제약 하에서 시간을 배분하는데, 여성이 출산으로 비시장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때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하며, 소득 상실을 비롯한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므로 결국 취업여성의 출산은 감소된다(Becker, Murphy & Tamura, 1990; Becker, 1993). 한편 여성의 임금 상승은 시간집약적 재화인 자녀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게 만들고, 결국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소득효과(income effect)보다 우세하게 되어 출산이 감소한다(Becker et al., 1990; Becker, 1993; Willis, 1973). 홍성희(2016)는 1990년과 2010년 두 시점 간 우리나라 출생아수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율을 낮추며, 경력단절현상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1990년에 비해 2010년에 더 심각했는데, 경력단절의 기회비용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영선과 이연숙(2015)의 연구에서 여성의 취업은 첫 출산, 두 번째 출산에 각각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취업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고 출산휴직과 복직이 자유롭지 않아 경력이 단절되며 결국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수요이론과 달리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양(+)으로 역전되었다(Billari & Kohler, 2004). 정진화, 김현숙과 임지은(2019)은 OECD 국가의 2000년 이전과 이후 출산율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율을 낮추는 대체효과보다 가구 소득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는 소득효과가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 상반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국가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편차에 기인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한 황진영(2013)은 130개 국가의 1980년, 1995년, 2005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출산율과 음의 관계를, 임계값 이상의 높은 국가에서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U자형 관계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전체 국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임계점 이상인 국가, 이하인 국가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국가와 임계점 이하로 낮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임계점 이상인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녀수요이론을 비롯한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의 관련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이론이 Easterlin(1973)의 상대소득가설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출산은 자신의 절대소득보다는 준거집단 내 상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며, 잠재적 가구주가 자신의 소득으로 원하는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과 출산을 하고 반대의 경우 미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준거집단은 원가족인 부모이며, 부모의 생활수준, 즉 부모의 소득에 비해 자신의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상대소득가설은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 간 소득 변화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OECD 국가의 출산율의 추이와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준다.

경제학 분야의 이론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1인당 GDP, 실업률, 평균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변수, 여성의 소득 및 가구소득,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직접적 비용과 기회비용과 같은 가계변수 등의 영향을 검증해왔다. Luci-Greulich & Thevenon(2013)는 1960~2007년의 OECD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 출산율과 GDP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고소득 국가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남국현(2018)은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1인당 GDP가 출산율과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냈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제상과 송유미(2016)는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선진국 그룹에서는 출산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고했다. 즉 국가의 산업화단계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출산율에 반대 방향의 영향을 미쳤다. 국가 간 출산율을 비교한 은석(2015)은 1인당 국민소득이 출산율에 약한 정적 영향을 보고했다. 민연경과 이명석(2013)은 18개 OECD 회원국의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비율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 1인당 GDP의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선진국 또는 고소득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 남녀소득비율 등의 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하지 않은, 즉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국가 간 GDP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수준의 차이, 여성 개인의 연령, 직종, 소득수준 등 경제적 배경과 지원정책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연관성 하에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 접근

OECD 국가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를 음에서 양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여성의 고용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정책은 가족수당, 부모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제도 또는 시간지원정책, 유아보육시설 공급 등 현물지원의 세 가지로 집약되나(정진화 외, 2019), 세부시행방식, 시행규

모, 대상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보고되고 있다. 현금지원정책의 경우 연구에 따라 측정 방식이 다양하고, 정책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Gauthier & Hatzius(1997), Luci-Greulich & Thevenon(2013), 최영과 김슬기(2017)는 현금지원이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Castles(2003)는 정부의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은석(2015)은 가족수당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고했다. 현금지원의 부정적인 영향은 현금지원의 실제 급여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뿐이며 출산행태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운정(2014)의 견해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따라서 현금지원 수혜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출산율 제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된다. 캐나다 퀘벡의 현금지원 유사실험사례를 분석한 Kim(2012)은 현금급여에 의한 출산확률 변화에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급여의 상대가치가 더 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고하였다. 윤승희(2013) 역시 17개국의 현금지원정책이 중층과 하층 여성의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상층 여성에게는 부적 영향을 보고했다. 이는 수혜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간지원제도와 출산율의 연구 또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고선강(2016)은 기업의 산전후휴가제도가 20~30대 기혼 직장 여성의 출산의향을 높이며, Shim(2014)은 모성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반면, Gauthier & Hatzius(1997)는 모성휴가기간이나 모성휴가급여가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D'Addio & d'Ercole(2005)은 모성휴가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출산휴가기간이 길어지면 모의 고용단절이 길어지고, 특히 전문직의 경우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연경과 이명석(2013)의 견해로 설명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은 대체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Castles(2003)는 영유아의 유치원 등록률이 합계출산율을 높인다고 하였다. 은석(2015)은 OECD 26개국의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공교육비지출비중 등 교육책임성, 그리고 영유아보육이 출산율에 양의 효과를 보인 결과에 대해 출산 전후의 단기성 지원금보다 정부가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면서 얼마나 책임지는지가 출산율 고양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각국의 가족정책유형에 따라 출산율 제고 효과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김사현과 홍경준(2014)의 연구 결과에서 잘 설명된다. 이 연구에서 21개 OECD 회원국의 현금지원, 시간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이 상이하며, 현금지원과 시간지원정책의 영향은 각각 타 정책의 규모에 의존하면서 출산율을 증가시켰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율 제고는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정책이 동반

될 때 가능하며, 따라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 시간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양성평등가치 접근

McDonald(2000)의 성 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은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이 회복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성 평등을 개인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에서의 성 평등과 가족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s)에서의 성 평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지향적 제도에서의 성 평등은 교육, 취업, 건강 등 개인의 삶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다. 가족지향적 제도에서의 성 평등은 부부가 소득 창출, 가사노동,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해 자원과 능력을 동등하게 분배하고 참여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교육, 취업과 같은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는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가족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 저출산이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과 유사하게 김인춘과 최정원(2008) 또한 노동시장정책, 돌봄정책과 더불어 양성평등문화 조성이 잘 연계된 국가에서 출산율이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제상과 송유미(2016)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가족의 중심축이 부자의 수직축에서 부부의 수평축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은 결혼 등 가족형성 측면에서 남녀 개인의 평등을 이루는 산업화단계와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유지 측면에서 부부 평등을 이루는 후기 산업화단계로 진행되는 데 주목하였다. 이때 가족 중심축의 변환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이며, 후기 산업화단계에서 가치관의 변화로는 여성의 성 역할 변화, 양성평등 가치관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화 단계에 따라 출산을 결정하는 성평등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평등수준이 다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회복되는 현상은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성평등문화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이 보편화되고 있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성평등가치의 지표로는 성평등 수준(Chesnais, 1998; Torr & Short, 2004, 성평등가치관(민연경·이명석, 2013), 성불평등지수(남국현, 2018), 성 격차지수(이제상·송유미, 2016) 등이 있다. Torr & Short(2004)는 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부부간 가사분담정도가 높은 가구가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둘째 자녀 출산율이 높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민연경과 이명석(2013)은 OECD 18개 회원국의 2000년~2007년의 통합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양성평등문화를 나타내는 전문직 여성비율의 상승은 출산율을 하락시킨 반면 행정·관리직 여성의 비율은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여성들은 출산으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간이 길

어질수록 이전 직장으로서의 복귀가 어려워질 위험, 즉,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다. 남국현(2018)은 성불평등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불평등지수는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의원 비율에서 남녀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남녀가 불평등한 상태이다. 성불평등 상태는 여성의 권한이 낮고 여성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포기하도록 작용하며, 따라서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다. 국가의 소득구간별 분석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중간소득, 저소득 국가로 갈수록 성불평등지수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였다.

출산율에 대한 세 가지 접근에서 주목한 변수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1인당 GDP, 남녀 1인당 임금 차이, 여성의 교육수준, 첫 자녀 출산연령을 포함시켰다. 1인당 GDP, 남녀 1인당 임금의 차이는 경제학적 접근에서 기술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첫 자녀 출산연령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교육은 지식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기반이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력 향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입증되어 왔다(Heckman & Walker, 1990; Oppenheimer, Kalmijn & Lin, 1997; 이제상·송유미, 2016; 홍성호, 2016).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과 출산율은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 첫 출산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기 때문이다(Morgan & Rindfuss, 1999). Sobotka(2004)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유로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것을 들었다. 가족을 형성하는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는 출산 기간을 감소시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산업화 시대에 유럽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증하면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저출산 현상이 완화되면서 저출산을 반등시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30년 간 OECD 회원국의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출산율과 관련될 수 있는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가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가족정책변수는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는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세 가지 유형이다(표 1 참조).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로, 만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 여성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이 경제활동과 자녀 출산,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정책변수로, 각 국가에서 출산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의 모성 출산휴가기간과 부성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하였다. 셋째, 각 국가의 양성평등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성불평등지수와 성평등가치이다. 성불평등지수는 1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자료로, 여성의 생식건강, 권한, 노동참여의 3개 부분에서 측정된 5개 지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생식건강 지표는 모성사망비와 미성년자 임신율을 측정한 것이며, 낮을수록 양성 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여성의 권한

지표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남녀의 중등 이상 교육률의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참여는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성평등가치는 106개국에서 수집된 World Value Survey 자료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에 따라 5년 주기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적합성, 대학교육의 중요성, 취업의 우선권을 비교한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¹⁾ 각 항목의 값이 클수록 성 평등한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는 1인당 GDP,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 교육수준, 남녀 1인당 임금차이를 선정하였다. 출산 결정에 여성의 취업소득 이외에 남편의 소득, 가계총소득 또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가구자료의 한계로 남녀 1인당 임금차이를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OECD 회원국 35개국의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를 포함한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에 앞서 Hausman test를 실시했을 때 귀무가설이 기각됨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자료 출처
종속변수		
출산율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인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명)	World Bank
통제변수		
1인당 GDP	1인당 GDP(로그값)	World Bank
첫 자녀 출산연령	여성의 첫 자녀 출산 연령(세)	World Bank
교육수준	여성의 평균 교육연수(년)	UNDP
남녀 1인당 임금차이	남성 임금(중앙값) - 여성 임금(중앙값) / 남성 임금(중앙값)(%)	OECD
독립변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여성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World Bank
가족정책변수 :		
유급 부성출산휴가기간	유급의 부성 출산휴가기간(주)	OECD
유급 모성출산휴가기간	유급의 모성 출산휴가기간(주)	OECD
양성평등가치변수 :		
성불평등지수	모성사망율,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남녀 중등 이상 교육비율 및 남녀 경제 활동참가비율의 차이(5개 지표) 0= 완전 평등, 1=완전 불평등	UNDP
성평등 가치	대학교육 : 대학교육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중요함 정치지도자 적합성 : 정치지도자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적합성 일자리 우선권 : 일자리 부족 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권한을 갖음 1= 매우 동의, 2= 대체로 동의,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 매우 동의하지 않음	World Value Survey

1) 5년 주기의 설문조사이므로 조사되지 않은 연도의 결측값을 대체하는 linear interpolation방법을 적용하였음

에 따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아닌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고정효과는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가의 이질성(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하는 고정효과(Country Fixed Effect)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시차에서 오는 이질성(time-varying unobserved heterogeneity), 예를 들면 경기 침체 또는 경기성장을 고려한 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포함한다. 고정효과는 기존 변수들로 잡아낼 수 없는 요소들을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가지 고정효과를 모두 포함해야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VIF 계수가 10 미만으로 회귀분석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출산율에 앞선 전년도 자료값(lagged value)으로 투입하여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 package는 STATA ver. 16.0이다.

IV. 분석결과

1. 기초분석

출산율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는 <표 2>와 같다. 평균출산율은 2.93명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64%이

다. 통제변수인 1인당 GDP(로그값)는 약 18,680, 여성의 교육수준은 평균 7.45년, 첫 자녀 출산연령은 28.86세였다. 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이를 나타내는 남녀 1인당 임금 차이는 16.7%였다. 가족정책변수인 유급 부성출산휴가기간과 모성출산휴가기간은 각각 4.65주, 49.64주였으며, 부성출산휴가는 전혀 없는 0부터 최대 52주까지, 모성 출산휴가는 0에서 166주에 이르기까지 매우 편차가 컸다. 성평등가치 변수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대학교육의 중요성', '정치지도자로서 적합성', '일자리 우선권'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로, 각각 2.99, 2.51, 1.26이며, 3개 지표를 합산한 평균값은 2.26이었다. '대학교육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양성평등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정치적 역할이나 직업에 비해 교육에 부여하는 양성평등한 가치수준이 높았다.

2. 출산율 결정요인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은 독립변수로 통제변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투입한 모형 I, 가족정책변수를 추가한 모형 II, 양성평등가치변수를 추가한 모형 III과 모형 IV의 순으로 변수군을 추가하면서 영향 요인에 변화가 있는가를 비교하였다(표 3).

모형 I에서 통제변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투입했을 때 1인당 GDP, 여성의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여성이 소득 상실이나 경력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 등 경

<표 2>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출산율	2.93	1.55	0.9	7.77
독립변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93	15.69	8.03	87.86
유급 부성출산휴가기간(주)	4.65	9.89	0	52.6
유급 모성출산휴가기간(주)	49.64	48.93	0	166
성불평등지수(0-1)	0.39	0.2	0.04	0.81
성평등 가치(1-4)	2.26	0.29	1.61	3.04
성평등가치 : 대학교육	2.99	0.28	2.14	3.82
: 정치지도자 적합성	2.51	0.42	1.38	3.45
: 일자리 우선권	1.26	0.27	0.3	1.92
통제변수				
1인당 GDP(log값)	18,680.54	19,744.38	436.72	115,415.44
첫 자녀 출산연령	28.86	1.71	23.7	32.6
교육수준 (년)	7.45	3.42	0.3	13.8
남녀 1인당 임금 차이(%)	16.7	8.57	0	47.3

제적 이유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경제학적 이론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OECD국가에서 보육시설 확충, 부모의 휴가 확대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충되면서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송다영(2005)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다.

모형 II에서 가족정책변수인 유급의 부성 출산휴가기간과 모성 출산휴가기간을 투입했을 때 모형 I에서 유의했던 1인당 GDP,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유지되었으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과 남녀 1인당 임금차이가 각각 출산율에 유의했다. 1인당 GDP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는데, 1인당 GDP가 출산율에 부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성향이 변화되어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소득 효과와 같은 맥락으로 유추된다. 교육수준 또한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이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Morgan & Rindfuss(1999)의 주장이나 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이유가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한 Sobotka(2004)과 같이 출산 시작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다. 또한 남녀 1인당 임금 차이가 클수록 출산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낮은 임금이 여성에게 경제활동보다는 자녀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유도하거나 여성의 일자리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국현(2018)의 연구에서 남녀 1인당 GDP의 차이가 클수록 출산율이 증가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성 출산휴가기간은 모성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취지와는 달리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 배경을 유추해보면 거시적 측면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따라 모성휴가에 대한 인식과 제공수준,

〈표 3〉 출산율 결정요인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005*** (0.002)	0.009*** (0.002)	0.008*** (0.002)	0.007** (0.003)
1인당 GDP (log값)	-0.109*** (0.035)	-0.106*** (0.035)	0.323*** (0.063)	0.284*** (0.064)
첫 자녀 출산연령	-0.003 (0.010)	-0.023** (0.010)	-0.040** (0.016)	-0.043*** (0.016)
교육수준	-0.015*** (0.005)	-0.018*** (0.005)	-0.004 (0.009)	-0.007 (0.009)
남녀 1인당 임금 차이	0.001 (0.001)	0.005*** (0.001)	0.002 (0.002)	0.003** (0.002)
유급 부성출산휴가기간		-0.005 (0.004)	0.010** (0.004)	0.012*** (0.004)
유급 모성출산휴가기간		-0.027*** (0.005)	-0.017*** (0.006)	-0.015** (0.006)
성불평등지수			2.323*** (0.231)	2.177*** (0.257)
성평등 가치			-0.282*** (0.074)	
성평등가치: 대학교육				-0.210*** (0.065)
성평등가치: 정치지도자적합성				-0.006 (0.101)
성평등가치: 일자리 우선권				-0.025 (0.071)
상수항	1.616*** (0.378)	1.940*** (0.393)	-1.895** (0.737)	-1.267 (0.808)
Observations	639	557	216	216
Country FE(Country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ar FE(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 $p < .01$, ** $p < .05$

이용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며, 가족정책의 다른 유형인 현금 지원이나 보육서비스 지원의 시행 여부에 따라 모성휴가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여성 개인의 출산휴가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력단절의 우려나 출산 이전의 직무로 복귀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나 자녀 양육이 여성의 역할로 고착되는 가족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양성평등가치변수를 추가한 모형 III에서는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1인당 GDP는 모형 II에서와 같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정의 영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각 모형에 포함된 다른 설명변수들의 조합과 샘플 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 II에서 유의했던 교육수준과 남녀 1인당 임금 차이의 영향력이 유효하지 않았다. 한편 부성 출산휴가기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성 및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모두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모성 출산휴가기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즉, 출산여성 본인에게 주어지는 모성출산휴가는 출산율을 낮추는 반면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한데, 한 가지는 여성의 출산휴가가 길어지면서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짐에 따라 출산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성 출산휴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모성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모의 출산휴가에 더해 아버지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자녀 양육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다. 한편 추가 투입된 성불평등지수의 영향은 정적 영향으로,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성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기혼여성에게 출산을 우선으로 하는 성역할이 요구되며,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됨으로써 출산율을 높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성평등 가치관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주며, 양성 평등한 가치관이 확립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모형 IV에서는 독립변수 중 성평등 가치관의 3개 하위지표를 분리하여 투입시킨 결과 교육 분야의 성 평등가치관이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보다 남성에게 대학교육이 더 중요하다'에 동의하지 않는 양성 평등한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한편 정치지도자로서의 적합성과 일자리 우선권에 대한 가치 수준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보편타당한 가치인데 비해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자리 또한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사노동자의 성별 분업적 역할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형 III에서와 달리

남녀 1인당 임금 차이의 영향력이 유의했으며, 남성 임금 대비 남녀 간 임금차이가 클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분석 결과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변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일관성 있는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지 않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정진화 외, 2019; Ahn & Mira, 2002; Rindfuss, Guzzo & Morgan, 2003)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성숙한 산업화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양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하는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 노동시장, 기업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가 확충되어 왔으며, 개개인이 유연한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가족의 돌봄을 수행하는 양성 평등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산의 배경 또는 원인을 분석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보면,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성평등가치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가치가 출산율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이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양성 평등한 가치가 조성된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이는 McDonald(2000)의 성 평등이론에서 교육, 취업과 같은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의 남녀평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부부가 소득 창출과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책임지고 수행하는 가족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 저출산이 지속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성평등 인식이 가족 및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차이, 또는 성평등 인식의 지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족정책변수는 출산율을 부분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성 출산휴가기간은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모성 출산휴가기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장기화된 모성 출산휴가가 기혼여성들에게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크거나 여성을 자녀양육

전담자 역할로 고정시키는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에 비해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장기적인 과업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과 양육 및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 지원보다 보육비와 보육서비스 지원이 효과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휴가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인식될 있다. 그에 비해 부성 출산휴가기간은 남편의 육아참여와 가사분담으로 이어져 첫 출산 뿐 아니라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부부가 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출산의지가 강하며,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Torr & Short(2004)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부성 출산휴가정책이 정책적으로 출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부부 간 양성 평등한 가치와 역할 분담을 실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성 출산휴가가 일·가정을 양립하는 지원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남성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통계량에서 확인된 부성 출산휴가기간은 전혀 없는 경우부터 최대 약 52주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며, 평균기간이 약 4.65주에 불과해 여성의 평균 모성출산휴가기간인 49주에 비해서도 매우 짧다. 그러므로 실제로 부성 출산휴가제도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나 사용하는 남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각 정책이 대상자의 출산의향 또는 생애출산 전 과정의 계획과 상황에 따라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정책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을 제고시켰던 결과는 가족정책이 양성평등의 가치와 연결된다면 출산양육기에 있는 부부가 출산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효과, 나이가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즉, 양성 평등한 가치가 남녀평등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제도 안에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이 자녀양육을,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역할 분담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 연결시키는 지원방안이나 인센티브제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보편화되면서 한 가계 내에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은 시간과 비용을 경쟁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대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녀 양육에 투입할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가구소득이 증가되는 소득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남편의 시간과 에너지 투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자녀 출산과 양육은 가족의 시간과 소득 등의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수반하며, 통합적인 자원관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자녀의 대학교육이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 양육 또한 양육비용 뿐 아니라 자녀가 교육을 마칠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기 계획으로 준비하는 과업이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은 자녀양육기 및 교육기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애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홍성희, 2020) 부부의 시간과 소득, 에너지를 배분하고 기회비용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미래의 생활 안정과 원하는 삶의 질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제변수 중 남녀 1인당 임금 차이가 클수록 출산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남녀의 임금 차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노동시장에서 성 평등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임금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자리가 비숙련, 저임금직 위주로 형성되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만연되어 있어 여성을 경제활동보다는 가정 내 영역에 머물며 출산과 양육의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역할로 고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인 경제활동참가율, 가족정책, 양성평등문화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분석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족정책으로는 유급 모성 출산휴가기간과 유급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모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급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내는 한편 출산여성의 휴가기간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는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출산휴가 지표나 자료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초통계량에서 출산휴가가 전혀 없는 곳부터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간을 세분화 또는 단계화시켜 분석하거나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보장비용 등의 경제적 지원 변수를 같이 빅 분석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소득은 출산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추측되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소득, 가계소득 등 가계 단위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소득 이외에 남녀 1인당 GDP의 차이, 여성의 직종, 종사상의 지위 등 소득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체변수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조사기관에 따라 연도 및 대상국의 차이에서 오는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모형에서 변수들을 추가함에 따라 공통된 값을 갖는 샘플 이외의 나머지 샘플들이 분석에서 제외되면서 샘플수가 축소되었으므로 분석 결과를 OECD 회원국가에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1) 고선강(2016).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연령 집단별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151-171.

- 2) 김사현 · 홍경준(2014).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41(2), 213-238.
- 3) 김인준 · 최정원(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 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6(1), 312-343.
- 4) 남국현(2018). 출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불평 등지수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5(2), 49-71.
- 5) 민연경 · 이명석(2013).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율 제고 효과: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103-132.
- 6) 송다영(2005).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25-551.
- 7) 송유미 ·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8) 신윤정(2014). 인구 대응을 위한 가족 정책의 전략. *보건복지포럼*, 213, 36-49.
- 9) 신윤정 · 김지연(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윤승희(2013). 복지국가의 가족정책과 계층 간 출산수준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0(2), 1-34.
- 11) 은석(2015). 교육 및 사회정책의 출산율 고양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System-GMM을 활용한 26개국 18년간의 패널 자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5-31.
- 12) 이소영 · 김은정 · 박중서 · 변수정 · 오미애 · 이상립 · 이지혜(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이제상 · 송유미(2016). 사회경제적 발전, 양성평등 그리고 출산율의 결정요인-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1), 256-270.
- 14) 정진화 · 김현숙 · 임지은(2019).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Becker 및 Esterlin 가설 검증과 가족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재정학연구*, 12(4), 1-47.
- 15) 조선일보(2021. 2. 25). 출산율 0.84명, 전세계 198국 중 꼴찌.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2/25/VUY4COP6MRCWFC3GARLOORUJIQ/에서 2020. 02 인출.
- 16) 최영 · 김슬기(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60, 59-86.
- 17) 한영선 · 이연숙(2015). 여성취업과 일 · 가정양립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1), 49-66.
- 18) 홍성효(2016). 출산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선택과 인적 구성의 변화. *아시아여성연구*, 55(2), 7-28.
- 19) 홍성희(2020). 남녀의 출산의향, 출산 희망연령과 계획 자녀수의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2), 69-87. DOI : 10.22626/jkfrma.2020.24.2.004.
- 20) 황진영(201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출산의 시기 및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가?: 국가 간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3(3), 361-384.
- 21) Ahn, N. & Mira, P.(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2002. DOI : 10.1007/s001480100078.
- 22) Balbo, N., Billari, F. C. & Mills, M.(2013). Fertility in Advanced Societies: A Review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1), 1-38.
- 23) Becker, G. S. & Lewis, H.(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S279-S288.
- 24) Becker, G. S.(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Boston : University Press.
- 25) Becker, G. S., Murphy, K. M. & Tamura, R.(1990). Human capital,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S12-S37.
- 26) Billari, F. & Kohler, H.P.(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A Journal of Demography*, 58(2), 161-176. DOI : 10.1080/0032472042000213695.
- 27) D'Addio, A.C. & M.M. d'Ercole(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7. DOI : 10.1787/1815199X.
- 28) Castles, F. G.(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DOI : 10.1177/09589287030133001.
- 29) Chesnais, J. C.(1998).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the European Union (EU-15): Facts and Policies, 1960-1997. *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7, 83-101.
- 30) Easterlin, R. A.(1973).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e American fertility swings. In E. Sheldon (Ed)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Lippincott, Philadelphia.
- 31) Gauthier, A. H. & Hatzius, J.(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295-306.
- 32) Heckman, James, J. & J. R. Walker(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 Econometrica, 58(6), 1990, 1411-1441.
- 33) Kim, Young-Il(2012). Impact of Direct Cash Transfer on Fertility by Income and Education Subgroup: Study of Allowance for Newborn Children from Quebec, Canada. *한국인구학*, 35(3), 29-55.
- 34) Kögel, T. (2004). Did the associ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within OECD Countries really change its sig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 45-65.
- 35) Luci-Greulich, A. & O. Thevenon(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4), 287-416.
- 36)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DOI : 10.1111/j.1728-4457.2000.00427.x.
- 37) McDonald, P.(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85-510.
- 38) Morgan, P. S. & Rindfuss, R. R.(1999). Reexamining the link of early childbearing to marriage and subsequent fertility. *Demography*, 36, 59-75.
- 39) Oppenheimer, V. K., Kalmijn, M. & Lin, N. (1997).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 311-330.
- 40) Rindfuss, R. R., K. B. Guzzo & S. P. Morgan(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 411-438.
- 41) Shim, J. (2014). Family Leave Policy and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including East Asia, In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Session 187: Family Policy and Fertility*. Boston.
- 42) Sobotka, T. (2004). Is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ained by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 195-220.
- 43) Torr, B. M. & Short, S. E. (2004). Second Birth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DOI : 10.1111/j.1728-4457.2004.00005.x.
- 44) Willis, R. (1973).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S14-S64.

- 투 고 일 : 2021년 03월 15일
- 심 사 일 : 2021년 04월 06일
- 게재 확정일 : 2021년 05월 11일